

# 1990년대 한반도의 핵위기 사태와 북한의 상황인식

장 원 석\*

## 目 次

- I. 머리말
- II. 북한의 외교철학
- III. 1990년대 핵협상에 대한 북한의 평가
  - 1. 1993년의 NPT 탈퇴와 기본합의 체결
  - 2. 1998년 금창리 핵의혹 사태와 페리보고서
- IV. 북한의 대미정책 및 대일정책
  - 1. 북미관계의 개선 요구
  - 2. 일본의 대북정책 비판
- V. 연방제 통일론의 이해
- VI. 맺는 말

## I. 머리말

이 글은 1990년대의 한반도 핵위기 사태에 대해서 북한정부가 어떻게 상황을 인식하였는지를 평양에서 출판된 한 자료<sup>1)</sup>를 통해서 살펴보려 한다. 이 책의 주장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 - 예를 든다면, 이 책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부정하고 있다 - 을 담고 있으며,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인 저자의 글이 곧 북한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첫째, 이 책이 평양에서 출판된 영문책자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 북한당국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둘째, 시간의 추이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의 세계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1) Jon Chol Nam, *A Duel of Reason Between Korea and US: Nuke, Missile and Artificial Satellite*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2000).

될 것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북한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과거의 정보에서 벗어나 사태의 실상을 공정하게 서방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이 책의 논리를 따라 북한이 생각하는 1990년대 한반도 핵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물론 외형적인 정당화의 논리가 진정으로 북한지도부의 본심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 II. 북한의 외교철학

일견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 북한의 협상행태와 관련하여 저자가 강조하는 북한의 외교철학은 대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은 외교를 체제의 사활이 걸린 총성없는 전쟁으로 간주한다.(p.78) 이러한 비장함의 배후에는 미국의 핵공격에 대한 숨막히는 공포가 큰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이제 북한이 주변국가가 두려워 할만한 수준의 충분한 군사적 보복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외교전술을 철저히 간파하고 있으며 결코 그 압력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기업연구소」가 출간한 『선(線)을 넘어서』(Over the Line)에서 척 다운스(Chuck Downs)는 북한의 외교협상전략을 비합리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성격의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이러한 평가는 의미가 없다. 북한과 같이 협상의 무기를 사용하여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나라가 또 있는가?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을 교활하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p.229) 외교는 약소국이 강대국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왜 군사대국인 미국이 북한에게 아부를 하는가? 그것은 북한이 미국을 꿈쩍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1953년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휴전협정을 무시하며 한미군사동맹, 미일군사동맹, 한미일 3자군사동맹을 통해서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자주국방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사태는 북한에게 충격을 주었다. 소련이 미국의 핵위협에 굴복하여 쿠바로부터 미사일을 철수시킨 이 사건은 사회주의 세계의 최강국도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북한은 미국이 소련과의 직접적인 충돌없이 사회주의 국가를 하나씩 파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비정한 국제정치의 세계를 실감한 북한은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압력을 바라보며 체제를 수

호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4대 군사노선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완성되었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이 되자 한반도 핵무기 배치에 박차를 가했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Team Spirit)가 시작되었다. 한국에 지대지 토마호크(Tomahawk) 미사일, 보병용 핵폭탄, 공군 핵폭탄 등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수십 년간 느껴온 핵공격의 공포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p.42) 북한은 생사의 위협 속을 살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제 제2의 한국전쟁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막강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1만 3천개의 장거리포와 다단계 로켓 발사대가 지하에 배치되어 있으며, 남한의 미사일은 반경이 80km인 반면 북한의 그것은 600km이다. 이는 대한민국 전역이 북한사정권내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ICBM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와 일본에 대해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다. 미국이 먼저 선제공격을 가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과 원자력 발전소는 불바다가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1개의 파괴는 1만개의 원자폭탄 폭발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p.68) 북한의 보복능력은 이라크의 그것과 다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원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 역시 모험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

둘째, 미국의 여론은 자신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무모한 전쟁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점차 세계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대해 사명감을 못 느끼고 있다. 과거에는 소련이라는 악마의 존재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으나 사회주의가 붕괴한 오늘날 그들은 특정국가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별로 관심이 없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에 제출된 가상전쟁 시뮬레이션(Operation 5027)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총병력의 절반에 해당되는 54만명을 동원해야 하고, 전쟁은 최소한 120일 간 지속될 것이며, 수백만명의 민간인이 희생될 뿐 아니라, 미군의 희생도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합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p.66) 미국은 걸프전에서 1천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자 낙담하였으며 소말리아에서 미군시체가 주민들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TV로 보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전(前)국방장관인 Schlesinger는 미군이 사상자를 용납하지 않는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p.97)

셋째, 미국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실패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걸프전에서도 후세인 정권을 전복하는데 실패하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비난하였고 국제사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분개하였다.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이라크에 대한 동정과 반미감정이 확산되었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채무국가이며 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 역시 외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기 어렵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미국의 외교 전술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며 북한은 결코 이러한 협박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은 상대방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는 능란한 외교술을 구사하는 국가이다. 5단계로 구성된 이 전술의 제1단계는 구두협박을 통해서 강대국의 힘을 최대한 과시하는 단계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 단계에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게 된다. 제2단계에서는 경제제재가 추가된다. 미국은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7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60회 이상의 경제제재를 가해왔다. 제3단계는 핵무기 사용가능성 과시를 포함한 무력시위의 단계로서 제7함대와 미해병대가 파견된다. 제3단계에 이르러서도 상대방이 저항을 계속하면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제4단계의 조치가 시작된다. 이상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굴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결국 화해를 시도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한다. 베트남이 그 전형적인 예이며 북한도 이러한 단계에 와있다. 1999년 미국무성은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비공식적 교류를 확대하였는데 쿠바 역시 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p.45)

### Ⅲ. 1990년대의 핵협상에 대한 북한의 평가

#### 1. 1993년의 NPT 탈퇴와 기본합의 체결

미국은 1993년과 1998년에 핵의혹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북한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에 대처하여 미국의 불순한 의도를 무산시켰다. 매년 사태의 본질은 미국이 핵위협 정책을 구사했을 때 북한이 핵카드를 십분 활용하여 승리한데 있었다.

1957년 미국의 주도하에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핵에너지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핵사찰을 의무화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직되었다. 핵무기 보유국가의 증대로 핵균형 체제의 붕괴가 우려되자, 기존의 5개 핵보유국가 이외의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1970년 체결되었다. 북한은 1976년과 1985년 각각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였다. 북한이 NPT에 가입한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이었으며 북한은 또한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기대하였다.(p.115) 1957년부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했던 미국은 1975년이 되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의 일반적인 관행을 깨고 공공연하게 핵무기의 존재를 과시하며 북한을 협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1년 부시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철수를 선언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 사실을 확인하며, 1992년 팀스피

리트 훈련에 대한 중단조치가 취해지자, 북한은 6회나 수시사찰(ad hoc inspection)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국제원자력기구」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의 두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을 일방적으로 또 다시 요구하였다. 북한당국은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례없는 사찰 요구가 주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천명하고 탐스피리트 훈련이 재개되자 북한은 즉각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미국 스파이 위성이 전송한 사진만을 근거로 제기된 핵의혹 사태에 대해서 일부의 견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유리한 위상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북한이 왜 NPT조약에 가입했으며 왜 그동안 사찰을 허용했는가?”라고 반문한다.(p.117) 북한당국이 핵폐기물을 은폐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김일성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음을 누차 강조하였다.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한 핵사찰을 주장한다면 미국은 그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저자는 「국제원자력기구」나 「핵확산금지조약」을 기존의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불공정한 기구이며 조약이라고 말한다.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은 자신들의 핵감축 노력은 외면한 채 이중잣대를 동원하여 약소국의 주권을 협박하고 있다. NPT조약 제10조 1항에 의하면 가입국은 국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약을 탈퇴할 권한이 있다. 저자는 만일 북한이 단호하게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노리에가(Noriega) 체포를 위한 파나마 침공이나 케네디 행정부의 피그만(Bay of Pigs) 공격과 사태를 되풀이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p.121, p.130)

북한의 NPT 탈퇴선언 직후인 1993년 3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89년에 이미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990년 그것을 해체했다고 공표하였다. 그것은 백 여차례의 수시사찰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세계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미국의 음모였다.(p.112) 그러나 결국 미국은 이례적으로 협상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북미간 기본합의가 성사되었다. 저자는 미국의 위기의식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조약탈퇴가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조약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이탈을 자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조약탈퇴는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 국가들로 하여금 조약의 의의를 경시하게 만들 소지가 있었다. 특히 인도는 핵보유국들의 의무를 강조하며 조약의 내용수정을 주장하고 있었다. 셋째, 미국은 NPT 조약의 효력연장을 앞둔 시점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조약 그 자체가 폐기될 수 있는 위험을 의식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명분으로 일본과 한국이 핵무기 자체개발에 착수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에게 있어서 1945년 이전의 역사로 되돌아가는 악몽과도 같았다.(p.150) 갈리(Ghali)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셀리그 해리슨(Serig Harrison), 글렌 페이지(Glenn Paige) 같은 미국내 인사들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북미간에 기본합의(The Agreed Framework)가 체결되었다. 기본합의에 대한 북측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핵확산금지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개척한 획기적인(epoch-making) 사건이었다. 둘째, 그것은 최초로 NPT체제의 결함을 시정하였다. 셋째, 약소국가도 의지를 굳게 먹으면 강대국의 핵위협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아시아의 비핵평화시대 수립 조치를 언급한 최초의 외교문서이다.(p.168-169)

## 2. 1998년 금창리 핵의혹 사태와 페리보고서

미국은 1998년 8월부터 영변 부근 금창리 지하시설의 핵발전소 건설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98년 12월 한국정부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1999년 6월 에 발표된 미국무성의 최종보고서 역시 핵시설 건설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사실상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 금창리 지하시설은 북한의 수많은 군사 및 민간 시설중의 하나이며 핵시설이 아니다. 폐쇄된 영변의 핵시설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어떠한 핵시설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이 기본합의를 백지화시키는 위협을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핵의혹은 기본합의의 의무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미국측의 논리에 불과하였다. 1998년 11월 한국의 『말』(Mal)지는 케니스 퀴노네스(Kenneth Quinones)의 말을 인용하며 지하핵시설 의혹이 한미양국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협상을 방해하려는 미국 비관론자(pessimist)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다.(p.92)

기본합의의 내용에 의하면 사찰의 대상은 영변의 시설에 국한되고 여타 지역에 대한 사찰의무는 명시된 바 없다. 따라서 사찰은 기본합의의 기본정신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논리이지 누구도 그것을 주장할 권리는 없다. 북한은 1회의 사찰을 허용하는 대신 사실과 다를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 정부는 나아가 지하시설에 대한 북미 합작투자를 제안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였다. 저자에 의하면 금창리 핵의혹 사건의 본질은 1994년의 합의를 재검토 - 폐기를 포함하여 - 하려는 미국이 그 구실을 만들기 위한 술책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차 의혹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

의 의도와는 다르게 협력을 약속하며 물러서게 되었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은 비행물체를 발사하였다. 그것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후 태평양에 추락하였다. 주일미군은 최초로 그것을 탄도미사일 발사로 추측하였고 이로 인해 한동안 발사된 물체가 미사일인지 여부를 놓고 소동이 일어났다. 9월 4일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하였으며 북한은 9번째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9월 17일 한국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으며 그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 6일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전(前)국방장관도 3단계 미사일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이 발사되었으며 미국이 북한의 기술수준을 과소평가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오직 일본 정부만이 탄도미사일 발사설을 계속 고집하다가 10월 30일 인공위성 발사를 암시하는 모호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왜 경제적인 시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하였는가? 저자는 북한이 이미 1992년 인공위성 발사준비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미국의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시기를 늦추었다고 말한다. 그 후 김일성의 사망에 대한 애도기간을 거쳤고, 1998년 북한정권 수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인공위성 발사를 결정하였다. 그것은 북한이 시련을 극복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북한의 국가적인 위엄을 제고시킨 사건이었다. 인공위성 발사의 보다 실제적인 목적은 외화획득을 위한 상업통신 개발, 농업용 기상예측, 자원발굴을 위한 효과적 탐사 등에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로운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를 선언함으로써 적이 공격하면 누구든지 보복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였다.<sup>2)</sup> 인공위성의 발사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였다.(p.36) 인공위성은 비록 평화적인 목적 속에 발사되었으나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이용하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 북한은 결코 핵무기개발의 의사가 없었다. 북한은 부분적으로 핵사찰도 수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대륙간 탄도탄이나 군사용 인공위성 개발 가능성을 의식하여 혼란에 빠질 것을 예측하였고 이를 심분 활용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수법을 알았지만 엄연한 현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럼스펠드는 인공위성 발사가 곧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개발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인공위성의 발사 기술은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의 응용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 이외의 국가가 ICBM을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미국으로서는 방위전략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

2) 그러나 저자는 다른 곳에서 인공위성 발사의 진정한 목표는 ICBM 충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p.80)

국은 공포로 떨어졌고 미사일 방어체제(NMD)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북한이 두 번째 인공위성 발사를 암시하였을 때, 미국은 무릎을 꿇었다. 1998년 10월 북한은 인공 위성 발사 재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 및 배치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경우 미사일 수출은 외화획득의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이 군사용 인공위성 개발가능성과 군사적 보복능력을 동시에 과시하자 북미간 군사균형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1994년의 약속을 무시한 채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기다리는 지연전술을 채택했던 미국은 「광명성 1호」의 발사로 기대가 무산되자 즉각적으로 식량지원을 비롯한 제재완화 조치 협상을 시작하였다. 미국은 페리보고서의 작성에 즈음하여 기본합의를 재검토하려던 종래의 입장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저자는 페리보고서가 일종의 항복문서와도 같다고 말한다.(p.254)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기본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리보고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이 미국의 핵확산금지 정책을 위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21세기 미국의 대북외교 원칙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다시 한번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패배했으며 1994년 기본합의의 이행을 강요받게 되었다.

1999년 3월 22일 미국 정부는 10만톤의 감자와 1천톤의 감자씨앗을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을 매개함 없이 직접 북한에 제공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 8개의 미국 민간단체가 관여하였는데 그것은 미국의 민간단체가 단순한 식량지원의 수준을 넘어서 북한의 농업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최초의 사업이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감자농업(potato farming) 프로젝트는 경수로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경수로 사업의 경우 그것은 실현여부가 불확실했던 반면 감자농업 프로젝트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에 의하면 감자농업 프로젝트를 보다 발전시킨다면 그것은 북한의 농업과 경제 발전의 전환점을 제공하는 소규모의 마셜플랜(Marshall Plan)이 될 것이다.(p.228)

## IV. 북한의 대미정책 및 대일정책

### 1. 북미관계의 개선 요구

핵의혹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과 일본의 반응에 대한 북한의 평가는 미국에 대한 호감과 일본에 대한 분노로 요약될 수 있다.

저자는 북미관계의 개선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급진전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베트남의 국교정상화는 한 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특히 경수로 건설 결정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한다. 북한은 핵개발이 용이한 흑연로(GMR) 대신 경수로 건설에 동의함으로써 평화의 의지를 과시하였다.(p.144) 마찬가지로 미국은 한국형 경수로를 고집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을 시도한 한국정부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이에 화답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일말의 통제력을 기대하며 트로이 목마로서 한국형 경수로의 관철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미국은 경수로 프로젝트의 유일한 주체는 자신이며 모든 책임 역시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후일 배신감을 토로하였다. 한국은 IMF 당시 미국이 보여준 가혹한 조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비애를 맛보아야만 하였다. 저자는 한국의 미국에 대한 감정에 애증이 교차되는 2중적 성격의 것이라고 말한다. 경수로 건설의 합의는 북미관계 개선의 중표이며 북미협력의 상징이었다. 핵협상 과정에서 시종일관 감정적인 태도로 일관한 일본정부와 달리 미국은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태도로 사태에 임하였다.(p.136)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의회는 기본합의의 철회를 주장하며 행정부의 유화적 태도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미의회가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주도권 다툼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본다.(p.82) 최초에 북한에 대한 타협적 정책을 수립한 것은 부시 행정부였으며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는 반대로 핵의혹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심지어 일부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공화당 행정부가 유지되었더라면 대북관계는 보다 일찍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두 개의 보수정당이 지배하는 국가이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한은 뒤늦게 미국의 저의를 의심하게 되었다. 미국은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연착륙 정책(soft-landing policy)을 추진하였으며 내심으로는 북한체제의 와해를 여전히 기대하였다. 기본합의의 근본정신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는데 있으며 특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연착륙 정책은 합의의 근본정신과 부합되지 않는다. 1998년 11월 한국정부는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의 용어를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으로 수정하였다. 이것은 한미 양국 정부가 용어의 표현을 조율한 결과인데, 햇볕정책, 연착륙정책, 개입정책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이다.(p.85) 북한은 서해 일부 지역과 나진·선봉 지구 등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겠지만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주체경제를 강화할 것이다. 한반도의 기본 논리는 2개의 경제가 공존하는데 있다.(p.247) 따라서 미국은 기본합의의 정신에 보다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

북한의 우선적인 외교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 북한은 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전력을 기울이는가? 북한이 남북대화보다 북미대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체제의 생존을 위한 긴박한 상황의 요청이다. 미국의 핵위협과 체제전복의 음모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의 약속을 우선적으로 받아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회복의 필요성이다.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편으로 군비경감을 통해 가용자원을 전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함으로써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북한은 특히 주석, 니켈, 코발트, 크롬, 납, 마그네사이트 등 풍부한 광업자원 개발의 잠재력을 강조한다. 먼저 오는 사람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p.106) 그리고 나진과 선봉은 제2의 홍콩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제이다. 미군이 철수하고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선행단계의 실현 없이 남북의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대화의 우선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따름이다. 남북대화는 북미대화가 성사된 후에 독립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경제적 패권이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자는 말한다.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달러 경제의 한계를 보여준 구체적 사례이며 국제투기자본가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는 그것을 세계자본주의경제의 해체징후로 파악하였다. MIT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미국 경제의 거품을 지적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수상은 IMF 체제에 맞서 투쟁하였다. 달러가 지배하는 고압적 경제질서의 종말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달러경제의 횡포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유럽과의 관계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2000년 이탈리아와 국교를 맺는 등 대유럽외교를 강화할 예정이며 유로(euro)의 힘을 빌려 달러에 맞설 계획이다. 이미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40%를 유로로 확보할 계획이며 대만과 쿠바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북한은 비동맹국가와 힘을 합해 단일 통화를 구축하고 달러와 유리에 모두 맞서 새로운 경제질서를 건설할 것이다.(p.249)

## 2. 일본의 대북정책 비판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일본에게 “페리의 흑선”(Perry's black ship)과 같은 충격을 주었다.(p.23) 저자에 의하면 1993년의 미사일 발사나 1998년의 인공위성 발사는 명백히 미국을 상대로 한 게임이었으며 일본은 관심사 밖이었다. 그러나 1998년의

경우 일본은 과거와 달리 극단적인 위기의식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한국이 비교적 냉정하게 사태에 대처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비이성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일본의 우익은 대포동 사건을 내심 환영하며 다수 국민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여 그들을 선동하였다. 주일 미공군사령부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정부는 신속하게 이에 대처하였다. 각료회의는 북일 외교정상화 협상을 중단하고 식량원조와 KEDO에 대한 협력중지를 결정하였으며 양원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일본의 항의내용은 두 가지였다. 비행물체 발사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그것의 영공통과는 주권침해라는 주장이다. 북한정부는 일본이 그 동안 십여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이를 알린 적이 없으며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사전통보를 하는 국제적 관례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인공위성이 일본의 영공보다 두 배 높은 고도를 통과하였으며 잔해는 공해상에 추락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반박하였다. 북한은 앞으로도 일본에 대해서 인공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를 사전통지할 의사가 없다고 공표하였다.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 왜 싸늘한 태도를 취하는가?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을 법적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국가로 간주하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채택해 왔다. 일본은 또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충실히 추종함으로써 북한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동안 일본과의 외교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계속해서 이를 무시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본인 납치의혹을 앞세워 대화의 재개를 거부하였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북한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나라이다. 북한은 일본의 오만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더 용납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일본이 자신과 친교를 맺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부 일본언론은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였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적극 만류해온 미국이 이번에는 사전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저지하지 않았는가? 왜 미국은 최초에 일본정부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 사건으로 사태를 통보하였는가? 저자 역시 미국의 태도를 수수께끼라고 말하며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계획을 유인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pp.31-32) 이라크와 북한의 존재는 침체일로를 밟고 있는 미군수산업에게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것이며 미국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본의 군비증강 사업에 자국기업이 동참하기를 원한다.

일본은 현재 두 가지 군사적 대응방안을 강구중이다. 하나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자위대에 의한 선제공격의 준비이다. 우선 일본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해서 TMD 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TMD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그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작업이

다. 탄도미사일을 탄도 미사일로 격추시킨다는 것은 총탄으로 총탄을 쏘아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TMD의 모체가 되는 미국의 “전역고고도지역방어”(THAAD) 체계 계획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이미 계획폐기를 고려중이다. 걸프전 당시 패트리엇(Patriot) 미사일이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둘째, 그것은 실전배치에 20년 이상의 시간을 요구한다. 그러나 20년 후의 상황은 TMD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셋째, 엄청난 경비조달의 문제이다. 만일 한정된 국방예산 속에서 가용자원이 TMD 구축에 투입된다면 상대적으로 자위대의 군사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pp.98-99)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사건으로 미국의 정보독점에 크게 불만을 갖게 된 일본정부는 1998년 11월 군사목적의 정보위성 개발을 결정하였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정보통제의 필요성과 군수산업의 요청으로 인하여 일본의 정보위성 독자개발을 반대하고 공동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교한 미국 군사위성의 감시하에 놓여 있는 북한으로 볼 때 일본의 정보위성 개발은 의미가 없다. 일본의 정보위성 개발계획은 일본정부의 자기위안에 불과하다(p.59)

일본이 다른 한편으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자위대에 의한 선제공격 계획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것이 TMD의 구축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정부 일각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위권의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일본의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다. 첫째, 자위대는 선제공격에 필요한 감시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자위대는 적의 레이더를 파괴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셋째, 자위대는 목표물에 대해서 정밀공격을 할 수 있는 레이저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다. 넷째, 자위대는 용단폭격을 할 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평화헌법의 존재도 제약요인이 된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군사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말한다.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가했을 때 일본의 전투기들은 현재로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능력이 없다. 일본은 북한의 지하 미사일 기지를 찾지도 못할 것이고 파괴하지도 못할 것이다.(p.61)

그러나 저자는 일본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미일방위협력지침”(Japan-US Defence Cooperation Guideline)에 있다고 말한다. 1997년 조인된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의 문제에 관계없이 일본은 자동적으로 참전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일본은 헌법 제9조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 저자는 일본이 현 상황하에서 북한과 맞서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

고 말한다. 일본의 군사무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따라서 일본은 자중해야 하며 경거망동해서 안된다. 일본은 군사적인 대응 대신에 주체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있다.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고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한일회담 이상의 수준을 요구한다. 일본의 이러한 책임은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에 대해서나 통일한국의 북측 지역정부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100) 그후 일본은 여타의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과거청산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북일관계의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며 일본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회복하는 최후의 국가가 될 것이다(p.100)

## V. 연방제 통일론의 이해

1998년 4월 10일 북아일랜드는 기적과도 같이 역사적 화해를 성취하였다. 신구교 두 당사자와 관련국가들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의하였다. 누가 이러한 결과를 상상이나 했겠는가? 양측의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북아일랜드 의회를 구성한다. 둘째, 새 의회는 아일랜드 정부와 더불어 국경을 초월하여 아일랜드 문제를 논의할 남북협의체를 구성한다. 셋째, 영국과 아일랜드의 정부대표,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의회대표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한다. 넷째, 아일랜드 공화국은 북아일랜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신의 헌법을 개정한다. 이러한 합의의 핵심은 영토와 국경을 강조하는 통일방식의 의의를 축소시킨데 있다.(p.189) 물론 한편에서는 이것이 통일을 지연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중오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였기때문에 북아일랜드 주민의 73%, 아일랜드 공화국 국민의 61%, 영국 국민의 80%가 이를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북아일랜드의 합의는 민족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20세기 후반의 역사적 사건이었다. 물론 한반도의 분단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며 민족적 갈등이 아니라는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90년대에 들어 냉전이 종식되고 무력분쟁과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심각해지자 해당국가의 국민들도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북아일랜드 분쟁해결에 결정적인 요인은 클린턴 행정부의 등장과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의 승리이다. 아일랜드 이민의 후예인 클린턴의 행정부는 북아일랜드 문제해결에 적극적 태도로 나섰다

며, 이전의 보수당과 달리 노동당은 아일랜드 공화혁명군(IRA)을 존중하고 신페인당(Sinn Fein Party)당을 회의석상으로 끌어들었다. 국내적으로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국민들이 베를린 장벽의 파괴로 큰 자극을 받았다. 한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완고하게 북한의 존재를 부정해오던 미국이 기본합의에 서명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로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현재 비록 경제체제조치가 해제되지 않았지만 상호신뢰구축과정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경수로 건설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양국은 다시 과거의 갈등관계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합의 외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이중삼중의 장치와 대화의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 모든 주변국가들은 비록 북한의 연착륙을 원하고 있지만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급격한 사태변화를 원치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한반도 통일을 예상한 외교전략을 수립중이다. 미국의 고위관리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전개될수 있으며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p.199) 이미 평화통일의 과정은 시작되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혼란을 원하지 아니하며 러시아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한 몫을 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 일본은 원칙이 없지만 대세를 추종할 것이다 - 한반도 주변국가 모두가 남북의 관계개선에 최초로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p.208)

국내적으로도 통일의 여건은 무르익었다. 남북한은 1972년의 7·4 공동선언과 1991년 불가침조약을 통해서 이미 북아일랜드의 합의수준에 도달해 있다. 특히 자주, 평화, 민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의 정신은 한반도의 분단이 일시적 관계임을 지적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민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김대중 정권은 이전의 김영삼 정권과 달리 흡수통일의 야심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도 미군철수의 문제를 필수조건으로 간주하지 않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양측의 경제위기는 역설적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자극하였다. 남한경제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으며 제2의 국치라고 할 수 있는 IMF의 지원으로 겨우 사태를 수습하였다. 최근에서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남한경제는 남북협력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맞게될 것이다. 남한은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게 될 것이며 남한의 상품은 나진·선봉지역을 경유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진출하게 될 것이다. 북한 역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의 도움으로 경제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북한 양측이 상이한 통일 개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 1월 1일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주어진 과제는 남북의 평화공존이며 통일은 다음 세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외관상으로 북한의 통일론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무엇을 통일의 단계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김

대중은 한 때 평화공존, 연방정부 수립, 완전한 통일이라는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첫 단계는 대만이 주장하는 2국가 체제이며 3단계는 최종적 통일의 단계로서 간주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리에 의할 때 언제 통일이 달성될 것인지 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반면에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은 중립적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수립을 통일로 간주한다. 이것은 장애요인만 제거된다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이다. 즉 통일은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할 사안이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우리는 통일국가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p.260)

소련과 동구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하자 남한의 보수세력은 북한을 대등한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민족공동체(commonwealth)의 개념은 용납되지만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남측의 민족공동체 이론이나 국가연합이론 모두 그것을 과도기적 단계로 이해하고 최종적인 통일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통일론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p.214) 연방국가를 통일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통일론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북한은 연방제를 통일의 상태로 간주한다. 그러나 남한은 국가연합을 잠정적 단계로 설정하고 완전한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어느 한편이 자신의 체제를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다. 하나의 체제로 통일이 되려면 서로 싸워야 하고 그것은 평화통일의 이론과 상반된다. 서로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통일로 간주하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다. 연방국가는 오랜 시간이 흐를 경우 하나의 통합된 체제로 발전할 수도 있는 법이다. 남한의 이동복은 "북한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는 한 통일은 성취되기 어렵다. 통일은 기다리는 게임이다. 현재로서 중요한 것은 통일 아니라 분단의 관리이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한국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p.216)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분단의 관리가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한국이 주장하는 "1국 2독립정부"(independent government)체제는 현재의 긴장을 연장하는 조치이며, 오직 "1국 2지역자치정부"(regional autonomous government)체제만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한다.(p.262)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국 2체제 방식의 통일정책을 지지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동일한 방식의 적용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연방제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주권의식이 우선적으로 요청되며 외세의존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정표가 될 조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정치적 결단이다. 그러나 2000년 현재 김대중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

지 않는다.

통일비용을 우려하는 일부의 견해는 연방제 통일의 경우 타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와 달리 연방제는 화폐통합이 강제되지 않는 한 통일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남과 북이 경제적 협력을 통해 자신의 경제를 튼튼히 해야하는 선결과제가 있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조기통일은 불가능하고 점진적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는 남한당국의 주장은 정반대의 논리로 반박될 수 있다.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양측은 경제적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다.

## Ⅵ. 결 론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외교를 체제의 사활이 달린 총성없는 전쟁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1993년과 1998년의 한반도 핵위기 사태의 본질은 미국이 핵의혹을 제기하여 북한을 위협했을 때 북한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암시하는 카드를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킨 사건이었다. 북한은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여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다.(p.82) 1993년 미국이 불충분한 근거를 앞세워 북한의 두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을 때 북한은 주권침해를 이유로 NPT를 탈퇴하였다. 미국은 NPT 체제의 와해를 두려워하여 결국 기본합의에 서명하였다. 북미간의 기본합의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아시아의 비핵평화지대 수립을 언급한 획기적인 문서로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미국은 1998년 또 다시 금강리 핵발전소 건설 의혹을 제기하였다.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하여 ICBM에 의한 보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다. 페리보고서는 기본합의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항복문서로서 의미를 갖는다. 핵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미국과 일본의 반응과 관련하여 북한은 미국에 대한 호감과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표명한다. 미국은 경수로 건설 합의 과정에서 한국의 집요한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99년에는 감자농업 프로젝트 지원을 결정하여 북한경제의 재건에 동참하였다. 북한은 미국이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연착륙정책을 하루 빨리 포기하고 기본합의의 근본정신에 보다 충실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한반도의 핵위기 사태는 자위대의 군비증강을 위한 구실로 이용되었다. 일본은 전역미사일방어체계 구축과 군사정보위성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심지어 선제공격론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대응조치

는 현재로서 실효성이 없으며 일본은 주체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 한 양국간의 외교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통일 개념의 인식 차이를 지적한다. 북한은 중립적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2정부체제를 통일의 상태로 간주한다. 그러나 남한은 심지어 진보적인 통일안마저도 연방국가를 통일의 잠정적 단계로 간주하고 완전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어느 한쪽 체제의 붕괴를 가정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한 논리이다.

이들 내용에 대한 분석에 입각하여 북한당국의 의식세계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첫째, 북한당국의 최고 관심사는 체제의 생존이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내용은 기본합의의 역사적 의의이다. 저자는 그것이 북한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본합의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저자는 통일을 제시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국가통합이 아닌 두 체제의 평화공존을 통일의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완전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구상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은 세계사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의 망상에서 벗어나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북한당국은 체제를 개방할 의사가 없다. 저자는 북한이 한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개입정책을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모욕이라고 비난한다. 한반도의 기본 논리는 두 개의 체제의 공존이다. 저자는 북한경제가 시련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아시아적 사회주의 나아가 한국적 사회주의는 생각보다 강인하다고 주장한다. 북한당국은 여건이 호전되면 사회주의 주체경제가 기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호한 의지의 표현은 체제의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반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당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다. 저자는 한편으로 미국이 보여준 이중적 행태에 실망하고 이를 비난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합리적인 협상태도를 예찬하며 양국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애써 강조한다. 또한 북미관계의 개선이 미국에게 가져다 줄 이익을 역설하고 한반도 평화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호소한다. 심지어 한국정부가 시샘을 할 정도로 양국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얼마나 민감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적과 친구도 될 수

있는 북한의 실용주의 정신을 보여준다 하겠다.

넷째, 북한당국은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사실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은 북한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왔고, 아마 북한은 미국과 달리 일본에 대해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 결과 저자는 일본의 군사력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며 일본이 외교의 무대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이 일본에 대한 경멸감을 노출시키는 또 다른 배경요인은 저자가 재일교포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핵카드의 실체는 미국의 자충수이며 이라크전의 경우와 같이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이 책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 담담하게 해명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별한 여운을 남기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조바심을 갖고 있는 한 미래의 핵개발 가능성을 담보로 언제든지 동일한 전술을 되풀이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위여부가 조만간 밝혀지면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허위로 드러날 것이다.